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1.01~26.01.31)

도시공간정보 디지털 기반 구축 지원 사업(민간서비스 실장 탑입) 모집 개시 [1/5]

- PLATEAU는 2020년 12월에 시작된 국토교통성이 주도하는 일본 전국의 3D도시 모델의 설비·오픈데이터화 프로젝트임
- 데이터 형식은 CityGML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한 것을 배포하고 있음. PLATEAU가 제공하는 3D도시 모델의 저작권은 국토교통성 도시국에 귀속되며, 상용이용을 포함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도시공간정보 디지털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서 「민간서비스 실장타입」을 모집함. 이는 자치단체 업무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분야에서, 민간이 3D도시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사회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국민이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를 널리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임
- 모집대상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3D도시 모델의 정비(갱신), 활용 및 추진에 관한 사업 가운데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보조율은 보조대상 경비의 1/2 이내 또는 5,000만 엔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선정함
- 사업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함. ① 3D도시 모델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3D도시 모델의 정비 또는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함. ② 3D도시 모델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3D도시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함. ③ 3D도시 모델 정비 및 활용, 오픈데이터화 추진사업으로, 3D도시 모델의 정비, 활용, 오픈데이터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발, 연수활동, 전문가파견, 정보수집활동, 웹사이트 작성 등의 정보 발신 활동, 워크샵, 이벤트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함

PPP/PFI플랫폼 협정제도에 관한 협정처 모집(제8차) 개시 [1/8]

- 내각부와 국토교통성이 지역 주도의 PPP/PFI(공공민간파트너십/민관위탁사업) 추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PPP/PFI 지역 플랫폼 협정제도'를 운영 중임. 이 제도는 지역의 산·관·학이 모여 PPP/PFI 사업 노하우 습득, 관민 대화,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사업화 역량을 키우는 플랫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제1차부터 시작되었음
- 협정 플랫폼은 강사 파견, 사업화 지원, 모범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 사업 기획·구상 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촉진하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36개 지역과 협정을 체결하였음. 최근 7차 (2025년 4월 2일 결정) 신규 협정 지역으로는 후쿠시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나가노현, 나라현, 시마네현 PPP/PFI 지역 플랫폼이 선정됨
- 전체 협정 지역은 카와사키시, 요코스카시, 토야마현·토야마시(대표: 토야마현·토야마시·호쿠리쿠 재무부·일본정책투자은행·호쿠리쿠은행·토야마제일은행), 이시카와 PPP/PFI 지역 플랫폼 (호쿠리쿠은행·이시카와현·일본정책투자은행·호쿠리쿠재무부) 등 지자체 중심 또는 금융·대학과 연계된 36개로, 최근 신규 추가된 후쿠시마·사이타마·치바·나가노·나라·시마네 등도 포함됨
- 제도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규 협정처를 모집함. 제8차 공모도 2026년 1월 8일부터 시작 됐으며, 지역 플랫폼의 PPP/PFI 이해도 제고와 민간 기획·제안력 강화, 사업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함. 협정 체결 지역은 내각부·국토교통성의 강사 파견,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무료

지원받아, 공공시설 운영, 도시재생,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PPP/PFI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사세보 PPP 플랫폼(2020년 협정)은 세부 사업 기획에 활용됐으며, 산요 지역 플랫폼(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시·야마구치금융그룹)은 금융·정책 연계를 통해 사업성을 높였음

□ 지자체로부터 관민연계 사업의 활용 수요 제안을 모집 [1/9]

- 국토교통성은 2026년 1월 9일, 지방공공단체의 인프라 노후화 대응, 유류 공공시설 활용, 탄소중립 추진 등 다각적 과제를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관민연계 모델링 사업」의 지방공공단체 활용 니즈 제안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음. 이 사업은 지방공공 단체의 니즈(과제)와 민간의 시즈(제안)를 매칭해 PPP/PFI 모델을 구축·검증하는 것으로, 인력 부족 속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 지원임
- 모집 테마는 세 가지로, ①지속가능한 인프라 매니지먼트 실현(노후 인프라 효율적 관리·장기 전략 수립), ②스몰 컨세션 추진(유류 공공자산의 소규모 민간위탁·활용), ③그린 사회 실현(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환경 사업)이 주를 이룸. 제안은 지정 양식에 작성해 온라인 폼 또는 지정 이메일로 2월 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며, 채택 니즈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공개됨
- 사업 설명회는 1월 14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됨. 이후 민간사업자 시즈 모집, 관민 매칭 이벤트, 조사 위탁 공모 등을 순차 진행해 우수 사례를 모델화할 예정임. 국토교통성은 이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전략적 인프라 관리와 민간 혁신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임

□ 중소기업 혁신창출추진사업(SBIR 페이즈3 기금사업)의 4회째 공모 [1/9]

- 국토교통성은 2026년 1월 9일,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사업(SBIR 페이즈3 기금사업)」의 제4회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이 사업은 SBIR 제도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을 수행한 스타트업 등이 대규모 기술실증(페이즈 3)을 실시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첨단 기술의 사회 구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성은 이를 통해 국토교통 행정 과제(스마트시티·인프라·재해 대응 등) 해결에 스타트업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임
- 페이즈1, 페이즈2가 '기술이 되는가?'를 확인했다면, 페이즈 3는 '이 기술을 실제 국가 인프라나 시장에 바로 쓸 수 있는가?'를 검증함. 국토교통성은 도로, 철도, 항공 등 방대한 공공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실제 구매나 서비스 도입으로 연결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함
- 국토교통성의 SBIR 페이즈3 제도는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에서 창설되었으며, 2023년 8월 첫 공모가 개시된 이래로 현재 49건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
- 공모 대상은 국토교통 분야의 페이즈 3 프로젝트로, 보조 대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며, 세부 공모 내용·신청 서류·절차는 PwC 컨설팅(위탁 운영) 사이트에서 확인·제출 가능함

□ 스몰 컨세션(*) 형성 추진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1/9]

- 국토교통성은 2026년 1월 9일, 지방공공단체의 유류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스몰 컨세션 형성 추진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인력 부족 속 인프라 노후화 대응과 공공자산 효율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구상·도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임
- 성과보고회는 2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도쿄미쓰비시빌딩 내 니혼 바시 홀 현장과 온라인 병행으로 개최됨. 행사에서는 훗카이도 이케다쵸(학교·의료·주택 일체 활용), 가나가와현 마나즈루쵸(옛 민속자료관 재생), 시즈오카현 시모다시(구 시청사 활용),

아이치현 안조시(구 카미야가 주택 활용), 효고현 히메지시(구 하마모토가 주택 활용), 나라현 나라시(구 야규번 가신 저택 활용), 쿠마모토현 나가스쵸(옛 중학교 활용) 등 7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가 구체적 검토 결과를 발표됨

- 국토교통성은 이 보고회를 통해 스몰 컨세션(사업비 10억 엔 미만 소규모 PPP/PFI)의 성공 모델을 공유하고, 공공자산을 관광·스포츠·복지 등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 스몰 컨세션(Small Concession)은 지자체가 보유한 저활용·유류 공공시설(폐교, 고택, 옛 청사 등)의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하여 수익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모델임

□ 제8회 국토지역계획 수립·추진지원 플랫폼(SPP)회의 개최 결과 [1/14]

- 국토교통성은 2026년 1월 14일, 12월 18일 후쿠오카시에서 UN Habitat·JICA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8회 국토·지역계획수립·추진지원 플랫폼(Spatial Planning Platform : SPP) 회의 (*) 결과를 공개했음. 이번 회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후쿠오카 플랫폼 제3회 네트워크 세미나」의 제1부, 남아시아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세미나」의 일부로 위치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회의의 중심 주제는 「광역 지역계획의 역할과 그 실효성」이며 일본 측에서는 최근 국토계획·광역 지방계획에 관한 기조공연을 통해 광역 계획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정비, 성장·분산의 균형 있는 국토 형성에 미치는 역할을 설명했음. 이어 국토교통성 큐슈지방정비국이 광역 교통·방재·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의 국토·지역계획제도와 과제, 실시상의 아이디어 등을 소개했음
- 패널 토론에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데이터·지식 공유, 재정·인센티브 설계 등 광역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놓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국토교통성은 SPP를 통해 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계획에 관한 좋은 사례와 교훈을 상호 학습하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국토지역계획 수립·추진지원 플랫폼(Spatial Planning Platform : SPP)회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이를 수 있도록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력 네트워크임. 급격한 도시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각국이 직면한 국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균형 발전과 재난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목표로 함. 특히 일본의 국토 형성 계획 경험을 주변국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의회 분쟁처리상황(2025년 제3사분기) [1/15]

- 건설공사 분쟁심의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따라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임. 건설업법 제25조의2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국토교통대신에게 분기 별로 분쟁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성은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함
- 2025년 3사분기 분쟁처리상황은 신규신청건수가 9건(작년 동기대비 3건 증가)임. 전기부터 이월된 건수가 27건이며, 이번기에 11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25건임
- 신규신청건수(9건)를 분쟁 관계자 별로 구분하면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분쟁이 7건이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2건임. 분쟁 내용별로 구분하면 공사하자와 관련된 것이 2건, 공사대금 지불에 관련된 것이 3건, 하도급대금 분쟁이 2건, 기타가 2건임

□ 빈집 대책에서 지자체와 부동산 사업자의 연계를 강화 [1/15]

- 일본 국토교통성은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과 민이 하나로 뭉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코쿠 지역 대상의 민관 협력 이벤트를 기획함
- 현재 일본 전역에서 빈집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행정력과 민간 부동산 사업자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것이 시급해진 배경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성은 양측의 접점을 마련하여 빈집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본 행사를 추진함
- 구체적인 행사 일시는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개최 장소는 카가와현 타카마쓰시에 위치한 카가와현 사회복지종합센터 7층 대회의실로 확정됨. 참가 대상은 시코쿠 지방 정비국 관할 내의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소재 지자체 빈집 대책 담당자들임. 또한 해당 지역에서 빈집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부동산 사업자들도 주요 참여 대상에 포함됨
- 행사의 핵심 내용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한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것임. 단순히 사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세션을 별도로 운영함.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인 매칭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업무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 국토교통성은 이번 시코쿠 지역 행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관리 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나아가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빈집 방치로 인한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함. 부동산 사업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이번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임. 행사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는 향후 지속적인 빈집 대책 추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임.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부동산산업과가 이번 행사의 주무 부서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11월분) [1/16]

- 2025년 11월 수주총액은 8조 7,802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7,305억 엔(전년동월대비 0.2% 증가)으로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497억 엔(전년동월대비 21.3% 감소)으로 8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7,305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3,176억 엔(전년 동월대비 4.3% 감소, 3개월 만에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4,129억 엔(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5조 7,305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3,328억 엔(전년동월대비 2.6% 감소, 4개월만의 감소)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6,562억 엔(전년동월대비 3.4%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7,415 엔(전년동월대비 31.4%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고령자의 안전·안심한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한 대처를 진행 [1/20]

- 일본 국토교통성이 고령자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교통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이번 대책은 고령자 사망 사고의 약 50%가 보행 중에 발생 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를 건너다 발생한다는 심각한 배경에서 마련되었음
- 국토교통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책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임
- 주요 대책으로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밝게 비추는 센서형 스포트라이트와 도로 중앙에 대기

공간을 만드는 2단계 횡단 시설 등이 포함되었음. 고령 보행자가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 장치를 극대화했음. 2단계 횡단 시설은 보행 속도가 느린 고령자가 한 번에 도로를 건너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됨

- 해당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령 보행 사고가 빈번한 직할 국도의 10개 구간을 선정해 선행 실시할 예정임
- 현행 교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보행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 이번 사업은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 국토교통성은 선행 대책 구간에서의 운영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고 사고 감소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임.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이 필요한 일본 전역의 다른 국도 구간으로 사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